



민주주의, 진실과 정의, 민중의 삶이 삭제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온갖 방해 공작 속에서도 기가 막힌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 경찰이 지난해 말 어떻게 진실을 덮었는지 드러난 것이다.

공개된 동영상에서 경찰 수사관들이 주고 받은 말은 이렇다.

“지금 댓글이 삭제되고 있는 판인데 잠이 와요?”, “이건 언론 보도에는 안 나가야 할 것 아냐”, “나갔다가는 국정원 큰 일 나는 거죠”, “비난이나 지지 관련 글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써 갈기려 그러거든요”, “[증거 문서들] 다 갈아버려요.”

“국정원에서...[NLL 대화록] 내용을 다시 끼워 맞춰다”는 권영세 음성 파일도 추가 공개됐다.

진실이 이런데도 새누리당 권성동은 “공무원이 댓글 단다는 생각을 못하게 교묘하게 댓글을 다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낮짜 두껍기가 이만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뿐 아니다. 새누리당과 국정원장 남재준은 집단 불참으로 국정조사를 무산시키고 있다.

이 모든 총체적 범죄의 꼭대기에 박근혜가 있다. 박근혜는 7월 들어 촛불집회

가 커질 듯하자, “귀태” 발언을 문제 삼으며 우파 결집용 ‘막말’ 소동을 벌였다. “스스로 개혁하면 된다”며 국정원을 감싼 것도 박근혜다.

급기야는 ‘사이버테러 총괄’이란 명분으로 국정원에게 방송사 전산망까지 관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려 한다. 거의 ‘도둑질하다 틀기니 강도로 돌변’하는 수준이다.

게다가 지금 이 범죄집단은 경제 위기 심화 속에서 자신들이 누구 편인지 본색을 더 분명히 하고 있다. 박근혜는 하지도 않은 ‘경제 민주화는 일단락됐다’고 하면서, ‘재벌 독재화’ 추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잠이 안온다

현대차 ‘희망버스’ 마녀사냥이 대표적이다. 박근혜가 자기 편이라고 믿지 않고서야 정몽구가 대법원 판결도 어긴 채 이토록 노골적으로 폭력을 휘두를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박근혜는 꼬리 자르기도 시도하고 있다. 개인 비리로 원세훈 구속, 감사원의 4대강 사기극 발표 등이 있었고, 전두환의 숨겨진 재산도 공개적으로 뒤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위험한 도박이다. 먼저 우파 결집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 당장 감사원 발표에 이명박 쪽이 조직적으로 반발했고 <조선일보>는 ‘전두환 죽이기’에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무엇보다 이명박과 전두환은 박근혜의 뿌리라는 점이 문제다. 전두환에게 6억 원을 지원받았던 게 박근혜이고, 이명박의 도움이 없었다면 박근혜는 대통령이 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자기 편 털기는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고, 이는 박근혜의 위기를 더 심화시킬 것이다. 사실 이것이 노태우, 김영삼 등 새누리당의 이전 정권들이 반복해 왔던 전철이다.

그럼에도 박근혜가 기대는 것은 민주당의 거둬들인 헛다리 짚기일 것이다. 민주당과 문재인은 새누리당의 ‘종북’과 ‘NLL 사수’ 프레임에 갇혀 계속 김 빠는 구실만 했다. ‘남재준 사퇴’는커녕 ‘진선미 사퇴’만 양보해 오다가, 어제는 김한길의 평택 해군 2함대를 방문해서 “NLL을 사수하는데 목숨 걸고 앞장설 것”이라며 다시 새누리당에 무릎 꿇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주당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사태

해결을 믿고 기다릴 수 없다. 국정조사는 이미 새누리당의 방해 공작 속에 껌데기가 되고 있다.

정말이지 ‘지금 민주주의와 진실과 정의가 삭제되고 있는 판인데 잠이 와요?’라는 말이 나올 상황이다.

이미 지난 한 달간 무려 1만 8천여 명이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촛불은 총체적 반동과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서는 모든 이들이 결합하는 운동으로 발전해서 박근혜 범죄집단을 집어 삼켜야 한다.

될 때까지 모이재!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진상규명 촉구 범국민 촛불대회

8월 10일(토) 오후 7시 장소 미정
8월 14~17일 오후 7시 장소 미정
(8월 15일(목) 10만 촛불)

주최 :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

쟁점 확대로 촛불을 더 크고 뜨겁게!

‘희망버스’에 대한 야비한 보복과 탄압을 막아내자

촛불 시위는 그동안 여러 쟁점과 결합되며 발전해 왔다. 7월 6일 촛불 집회 때는 진주의료원, 쌍용차, 철도 노동자들이 연단에 올라 큰 환호를 받았다. 13일에는 철도 민영화 반대 집회와 연결돼 2만여 명이 모일 수 있었다. 가장 큰 박수를 받은 발언은 현대차 비정규직 ‘희망버스’ 참가를 호소하는 김진숙 지도위원의 발언이었다.

이는 국정원 촛불 시위의 배경에 민주주의 유린에 대한 분노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온갖 반동적 정책과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대한 반감이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실제로 많은 평범한 사람들은 청년실업 1백만 명, 가계부채 1천조 원에 달하는 현실에 한숨 쉬고 있다. 반면 재벌들은 사상 유래 없는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보장 같은 대표적인 복지공약들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국민적 합의 없이는 철도를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했으면서도 버젓이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교훈

따라서 박근혜 정부에게 민주주의 유린뿐 아니라 공약을 먹튀하고, 노동자와 평범한 사람들에게 경제위기 고통을 떠넘기는 것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

촛불 운동의 요구를 총체적 정치 공작 규명과 책임자 처벌뿐 아니라 민영화 반대, 복지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으로 더욱 확대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요구를 확대하면 쟁점이 흐

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러나 오히려 요구를 확대할 때 촛불 운동이 다양한 부분에서 벌어지는 노동자 운동과 연결돼 더욱 발전할 수 있다.

최근 벌어진 터키와 브라질 등의 시위에서도 교훈을 배울 수 있다. 터키에서 게지 공원의 나무를 베는 것에 반대해서 벌어진 운동은 정부의 민주주의 탄압과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브라질에서 버스요금 인상에 반대해서 시작한 운동도 정치개혁 요구와 노동자 요구, 투쟁과 결합되면서 더 확대됐다.

심각한 경제 위기 때문에 고통이 광범한 상황에서 투쟁은 더욱 커질 잠재력이 있다. 쟁점을 확대하며 거리의 촛불과 노동자 투쟁이 만나게 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와 우파 언론, 경총이 ‘희망버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가하고 있다. 저들은 ‘희망버스’가 ‘폭력과 혼란만 낳았다’며 공격하고 있다.

왜곡과 조작도 서슴지 않는다. 예컨대 “쇠파이프 든 2500명, 펜스 뜯고 강제 진입”이라는 식이다. 그러나 당시 현장은 아스팔트 도로여서 던질 돌이 아예 없었다. 쇠파이프를 들고 돌을 던진 것은 되레 현대차 사측의 관리자와 용역경비들이었다.

이들이 쉴 새 없이 소화기와 물대포를 뿌려서 시위대는 한 치 앞을 보기 힘들 정도였다. 심지어 이들은 시위대를 향해 커터칼과 시퍼렇게 날이 선 낫까지 휘둘렀다. 이 때문에 머리가 찢어진 사람, 귀가 찢긴 사람, 뼈가 부러진 사람 등 1백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특히 낮에 베여서 살점이 떨어져 나간 사람들의 사진은 충격적이다.

경찰은 이런 폭력을 막기는커녕, 현대차 사측과 함께 시위대를 공격했다. 지금도 경찰은 ‘희망버스’ 참가자와 비정규직 활동가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있다.

정의로운 연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10년 동안 불법파견 속에 온갖 차별과 설움을 당해 왔다. 이 속에서 여러 명이 죽음으로 내몰리기도 했다. 최근에도 현대차 비정규직 박정식 열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병승, 천의봉 동지는 ‘법을 지키라’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를 하며 무려 3백일 가까이 고압철탄에 올라가 있다.

이런 과정과 상황이야말로 진정으로 끔찍한 폭력이다. 반면 희망버스 참가자들의 행동은 ‘폭력’이 아니라 불법과 폭력에 짓밟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민 정의로운 연대였다.

저들이 희망버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저들은 정의로운 연대를 끊고, 노동자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고 싶어 한다. 게다가 지금의 공격은 단지 ‘희망버스’ 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 맞선 저항 전체를 겨냥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은 “법이 무엇이고 원칙이 어떠한지 보여 줄 기회이자 공권력 확립에 대한 시금석”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과 특히 현대차 정규직 노조가 앞장서서 불법과 폭력의 주범인 정몽구에 맞서며 비정규직 동지들을 엄호해야 한다. 나아가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서며, 정의를 바로 세우길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희망버스’ 방어에 나서야 한다.



민영화에 반대하는 철도 노동자가 함께 하면서 7월 13일 촛불은 더 커질 수 있었다.

쓰레기 언론과 방송 -

총체적 정치 공작의 악질적 공범

주류 언론과 방송은 일단 천인공노할 총체적 정치 공작 사건의 진실을 알리거나 파헤칠 생각이 전혀 없다. 언론과 방송만 보고 있으면 이런 사건이 존재하는지도 모를 정도다.

언론과 방송사주들은 단지 못 본 척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실을 덮는 데 앞장서고 있다.

예컨대 “박원순 서울시장 비하한 글을 찾았다”는 YTN의 ‘특종’ 보도는 갑자기 뉴스에서 사라졌다. MBC <시사매거진 2580>의 ‘국정원에서 무슨 일이?’는 예고까지 나왔지만 불방됐다. MBC 사측은 이 문제를 다룬 기자를 징계하기도 했다.

가끔 보도하더라도 기껏해야 이 문제를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정쟁’이라는 식으로 다루며 사람들의 무관심과 냉소를 유도한다.

물론, 조중동과 종편은 박근혜의 물타기를 돕는 선봉장 구실을 하고 있다. 이들은 NLL에 대한 우파적 악선동을 거의 하루 종일 고장난 레코드처럼 틀어댔다.

무엇보다 역겨운 것은 갈수록 커지는 촛불집회에 대해 이들이 취하는 태도다. 주류 언론들은 7월 6일과 13일 1만 명이 넘게 모인 촛불 집회도 보도하지 않았다. 특히 2만여 명이 모인 7월 13일에 저녁 뉴스에서는 ‘장마철에 걸레를 삶아서 써야’ 등의 내용이 메인을 차지했다.

이것은 박근혜와 국정원, 언론사주들이 한통속이기 때문이다. 언론과 방송을 1퍼센트의 눈 귀 입으로 만드는 데 공동의 이해를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서 대중의 불만과 저항을 억누르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늘려 온 것이다.

그러나 4·19 혁명도, 1987년 6월 항쟁

도 주류 언론과 방송이 진실을 보도하고 저항을 호소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촛불을 더 크고 더 뜨겁게 만들면서 <레프트21>같은 저항 언론들을 후원하자. 쓰레기 언론과 방송은 박근혜와 함께 비참한 몰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관련 기사들이 실린

레프트21

108호를 구입해 보십시오.

<http://www.left21.com>

구입 문의: 02-777-2792
홈페이지에서 구독신청이 가능합니다.

